영국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갑작스러운 구조변혁: OST를 DTI의 산하기구로 옮겨

7월의 첫째 주에 영국 정부는 학계와 과학기술계가 경악할 만한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지난 '92년에 새로 설립되어 그동안 내각부(Cabinet Office) 산하기구로 운영되던 과학기술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OST)을 갑작스럽게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y; DTI) 산하로 자리바꿈해 버린 것이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정부 스스로 '92년 이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추진해 왔던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시시콜콜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낄만큼 「과학」쪽에 별반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논리나 전략 개념과는 동떨어진 다른 이유 때문에 이번 조치를 시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연히 학계와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과 우려가 섞인 반응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이같은 변혁이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이나 논리적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쪽으로 모아진다.

우선 OST가 출범한지 겨우 3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기대되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볼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92년 4월, 「과학기술 활동의 총괄 및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을 전담하는 부처로서 OST가 처음 돛을 올리던 때를 돌이켜 본다면 이번 조치는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계와 과학기술계에서는 그동안 OST의 출범에 이어, 유례없이 광범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백서」가 출간되고 이를 통해 연구회의(Research Council) 조직의 개편, 과학기술회의(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CST)의 신설, Forward Look의 발간, Technology Foresight Programme의 실시 등 각종 개혁조치가 이루어진데 대해 매우 고무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이같은 낙관적인 분위기는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렸으며, 이제는 이들 개혁조치가 계속해서 추진될 것인지의 여부조차 불투명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OST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할 시점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DTI의 여러 Minister 가운데 하나의 관할로 지위가 「좌천」됨에 따라 (<표1> 참조), 과학정책이 커다란 퇴보를 겪게 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OST와 DTI 두 기구 간에는 현격한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결과로 OST가 그 동안 담당해 오던 고유한 기능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산업계 위주의 단기수요」에 가려 이른바「기초과학 육성」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위기감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이같은 인식의 배경에는 DTI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감이 자리잡고 있

영국

<표1> Ministers of DTI('95년 7월 현재)

직 책	성 명
President of the Board of Trade	Ian Lang
Minister of State	Lord Fraser of Carmyllie
Minister for Industry and Energy	Tim Eggar
Minister for Trade	Antony Nelson
Minister for Company Affairs	Phillip Oppenheim
Minist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Ian Taylor
Minister for Competition and Consumer Affairs	Jonathan Evans
Minister for Small Business	Richard Page

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과거에도 「기존 산업 기술의 진흥」에 우선순위를 두는 DTI의 사고방식과「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OST의 장기비전 간에는 대립과 갈등의 여지가 상존해 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1) 따라서 이번 구조변혁으로 DTI의 여러 기능 가운데 하나로 편입된 데 불과한 OST가 과거만큼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치가 하필이면 왜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을 두고 각계 인사들은 정부의 의도와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구조변혁이 「심사숙고」결과라기보다는 Major 총리와 Heseltine 신임 부총리간의 「힘겨루기」과정에서 막판 협상의 결과로 갑자기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도 Heseltine 부총리는 OST를 DTI의 산하로 옮기면서 전임 David Hunt 과학장관이 내각 내에서 과학장관으로서 갖고 있던 지위를 대부분 자신이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이번 조치가 정치적인 「Heseltine 왕국 만들기」의 일환일 뿐, 정부가 그동안 그렇게도 요란스럽게 내세웠던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한 결정이 아니라는 비판에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jor 총리는 물론 바로 전임 DTI 장관이었던 Heseltine 부총리와 Ian Lang 신임 DTI 장관 등 이번 조치에 책임을 WU야 할 각료들은 모두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단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 과학정책과 산업정책이 더욱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새로 마련되었다」는 짤막한 논평 하나가 총리 명의로 발표되었을 뿐이다. 결국 이제까지 나타난 증거만 가지고도, 영국의 국가운영기조에서 「과학」이 갖는 중요성과 우선순위는 그리 높지 않다고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변화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만 드높은 것은 아니어서,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의 타당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의 논거는 「과학은 혼자 존재할 수 없으며 산업이나 무역과 연계되어야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것으로, 「DTI야말로 R&D 단계로부터 시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난 '93년에 발표된 「백서」에서 천명했던 것처럼 「R&D와 국부증진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치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논리를 편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내각 내에서 별개의 주제로 구분되어 왔던 「과학」과「기술」이 하나로 합쳐짐에 따라 과거보다 훨씬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용이할 것이라는 지적도 곁들여지고 있다.

전격적인 구조변혁이 단행된 지 3주일이 지난 다음 DTI의 과학기술담당 Minister인 Ian Taylor는 향후의 정책구상을 밝히는 공개회견을 통해, 「DTI는 과학 분야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미련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의 인원과 조직 및 업무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수석과학고문, 연구회의사무총장, Technology Foresight Programme 등 과거 OST 시절의 주요한 조직과 업무는 당분간 이전과 달라진 점 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두고 「과학기술계가 한밤중에 뜻하지 않은 융단폭격을 맞았다」고 까지 비유하면서 비판의 칼을 빼든 일부 과학분야 언론이나, 특히 이번 조치로 자신의 입지와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은 것이 확실한 OST 산하의 각종 연구회의 및 연구소 종사인력들의 마음을 얼마나 누그러뜨릴 수 있을런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DTI는 아무래도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학과 연구소에 배정되어야 할 예산을 빼내고, 주요 보직 담당자를 DTI 출신 인력으로 바꾸고, 연구소들을 모두 팔아버릴 존재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오는 9월에 새로 취임할 신임 수석과학고문 Robert May가, 과연 이전의 OST 시절(수석과학고문이 OST국장을 겸임했음)과는 달라진 자신의 위상과 또한 이전의 OST 시절과는 달라진 이들 연구회의 및 연구소 종사인력들 사이에서 얼마나「운영의 묘」를 보여줄 수 있을런지도 관심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金基國

<정책동향팀, 선임연구원>

주석1) DTI는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미래기술의 개발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현존하는 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다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기존의 최신·최우량 기술 및 기법을 배우고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고유한 업무라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과 관련된 DTI의 예산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정부 전체 기술개발예산의 5%, 민간기업 기술개발 투자규모의 2%에 불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우선순위를 심각하게 고려하

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결국 DTI의 경우 자신이 담당해야 할 고유한 역할을 「첨단기술개발의 지원」이 아닌 「기술이전의 촉진」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